

헌법

문 1. 입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구의 근대입헌주의는 18세기에 만개한 일련의 사상적 흐름 즉, 근대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 ② 근대입헌주의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대의제를 통한 피치자의 정치과정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③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입헌주의는 역사적으로 군주와 시민의 화합의 산물이며, 흥정헌법은 진정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다.
- ④ 현대의 입헌주의는 헌법재판제도를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과 헌법의 규범력 제고에 기여하며 사법국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⑤ 헌법에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

문 2.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②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입법형성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 이는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④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반한다.
- ⑤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3.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군은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이 주권자인 국민의 부담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국민군이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민원칙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행사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하고, 선전포고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는 군정·군령일원주의에 입각하여 양병작용과 용병작용을 모두 일반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군의 정치기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④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 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는 국군지휘권, 국군편성권, 국군규율권, 군사재판권 등이 포함된다.

문 4.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입법자가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가의 경쟁정책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려고 하는 것인바,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자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고 그 방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 ⑤ 오늘날 조세는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은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문 5.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 ㄴ.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ㄷ.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 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ㄹ.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
- ㅁ.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6.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군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당연제적의 사유로서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공무원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무원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직제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을 직권면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제도이고 면직의 기준 및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어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선출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공무원임권을 제한하게 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 ②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범위는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제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미친다.
-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 절차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문 8.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의 개별 요소들은 상호 관련되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헌법규범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미국의 경우, 헌법해석방법에 대하여 비해석주의(noninterpretivism)와 해석주의(interpretivism)의 대립이 있는데, 전자는 헌법문언이나 제정자의 원래의 의도로는 추적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위하여 헌법문언이나 제정자의 의도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에 대한 개방적인 해석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이고, 후자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문언과 제정자의 원래의 의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권력분립 및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석방법이다.
- ④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설사 입법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무효선언하는 규범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을 더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법조문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헌법조문의 해석도 필요한바,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이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아니된다.

문 9. 재미교포 甲은 乙 지방공사가 민간과 합작하여 설립한 丙 주식회사에 공개 경쟁시험을 통하여 취업하였다. 그 후 甲은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그 사유가 자신이 미국국적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p>ㄱ. 丙 회사에 관한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평등권 침해로 이유로 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p> <p>ㄴ. 甲과 丙 회사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p> <p>ㄷ. 丙 회사가 기존의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로써 남성인 甲을 차별한 것이라면, 丙 회사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p> <p>ㄹ. 甲의 진정 없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p> <p>ㅁ. 甲과 丙 회사가 합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다.</p> |
|---|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0. 국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한다.
- ②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③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 ④ 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무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다’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다’의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므로, 양 법익의 충돌에 대한 해결은 이익형량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자녀 취학의무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적·물적 교육시설 정비의무의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으로써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11.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는 허가의 성질보다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 ②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은 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③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과 마찬가지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통신에 해당하지만, 의사표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도 받는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인 스팸메일은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상·의견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반론권은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문 12. [보기 I] 에 열거된 헌법조문에 대한 체계적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II] 에서 모두 모은 것은?

[보기 I]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한다.

[보기 II]

ㄱ. 국가권력을 기능적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국가의 권력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ㄷ.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ㄹ. 통치자와 주권자는 동일체라야 한다는 자동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ㅁ. 국가기관의 담당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ㅂ. 국민의 대표자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직접 진다.

- ① ㄱ, ㄴ
- ② ㄹ, ㅂ
- ③ ㄱ,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ㅁ, ㅂ

문 13.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이 없으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이다.
-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 법률뿐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
- ③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 ④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은 1972년헌법에서 추가되었다.
- ⑤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문 14.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부분은, 협박의 죄를 범한 자와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법원의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국회나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급심법원이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15. 다음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를 50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18세에 달한 자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법률
- ②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
- ③ 대통령이 권위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
- ④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률
- 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경찰청장의 권한정지의 시점을 그 소추의결서가 경찰청장에게 송달된 때로 정하는 법률

문 21. 기본권의 주체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 사망한 경우에 피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상속인은 자신이 따로 고소를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관련조항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 ④ 주식회사의 주주가 고발한 사건인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사건에서 직접적으로는 회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원칙적으로 공적 조직의 권한에 의하여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문 2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경계감호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⑤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23. 검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②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
- ③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안됨' 결정을 한 경우, 이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문 2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이외에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한편, 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원리 중의 하나인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고,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는 한편,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급부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 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문 33.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들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영역이나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에 상치되지 아니한다.
- ③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분은, 수질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유동적 대처를 위한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동일인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인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34.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와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그 법적 성격, 목적과 기능의 면에서 사실상 조세와 유사하다.
- ②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④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관하여, 어느 정도를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가는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당하며,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넘은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다.
- 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는 담세능력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다.

문 35.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파산절차는 전형적 소송절차가 아니며 또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종래 파산법이 위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일부를 다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의 뇌물죄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고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군부대 등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신속히 군사재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지만, 관할관이 일반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
-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이 가지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과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의 체계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도 없다.
- 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그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하여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한 것은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구현하기에 부적절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36. 헌법재판에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의 경우에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없다.
- 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은 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 ③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재심을 허용한 바 있다.
- ⑤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문 37.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의 대상에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ㄷ.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는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
- ㄹ.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ㅁ. 국회 본회의는 의원 20인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문 38. 국회의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국회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④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⑤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39.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 가운데 필수적 국민투표제에 관하여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나, 임의적 국민투표제에 관한 헌법상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ㄴ.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 ㄷ.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ㄹ.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국민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 ② ㄱ(O), ㄴ(X), ㄷ(O), ㄹ(X), ㅁ(X)
- ③ ㄱ(X), ㄴ(O), ㄷ(O), ㄹ(O), ㅁ(O)
-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 ⑤ ㄱ(X), ㄴ(O), ㄷ(X), ㄹ(X), ㅁ(O)

문 40. 다음의 사례에 관한 ㄱ에서 ㄴ까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장애인 甲과 비장애인 乙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고시로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는데,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甲, 乙은 위 최저생계비고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ㄱ.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저생계비고시는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집행행위인 생계급여지급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최저생계비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ㄴ. 乙은 비록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甲과 함께 1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원의 자격으로 생계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고시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
- 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ㄹ. 위 최저생계비고시에 대하여 평등심사를 할 경우, 비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장애인가구와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애인가구로 보아야 한다.
-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ㄴ

④ ㄱ, ㄹ, ㄴ

⑤ ㄴ, ㄷ, ㄹ, ㄴ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